

다산포럼

공적 연금, 건전하게 운용하려면



전 창 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국민연금 급여가 아무리 박약한 용돈 수준이라 할지라도 전 국민의 노후 보장 제도로써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관련 이슈에 대해 늘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과연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굳건히 유지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 기초하에서 국민연금의 수치 현황, 적자로의 반전 시점, 더 나아가 국민연금 적립금의 고갈 시기 등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작업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추계이다. 1988년 국민연금 급여 체계가 도입된 이후 2003년이었다. 그 이후 5년 단위로 한 번씩 이루어져 왔

으며 2018년 하반기에 제4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작업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장기 재정 추계와 기금 운용의 중장기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연금의 실상은 어떠하며 이웃 일본은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장기 재정 목표 설정해야

우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심지어 부재하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장기 추계 결과만 있을 뿐 일관적인 장기 재정 운용 전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장기 재정 추계와 중장기 기금 운용(목표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 배분, 자산군의 비율 결정) 전략이 서로 완전히 따로 놓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은 오직 기금의 자산 쪽만 고려할 뿐 국민연금의 현재 및 미래 부채를 감안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지참에 나와 있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장기 목표는 경상경제성장률+CPI상승률+알파(조정치)를 달성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추계와 아무런 연계 없이 설정되었을 뿐이다.

이웃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실로 심각하다. 실제 1971년 한 해 약 200만 명이 출생했지만 46년이 지난 2017년에

는 출생 인구가 94만 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급속히 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자, 일본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하기 시작했다.

2004년 일본은 연금 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면서 공적 연금의 장기 재정 목표를 분명히 설정했다. 2004년 이전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무한의 장래를 상정하여 모든 기간에 연금 급여 지출과 이를 충당하는 데 드는 각종 수입을 균형(balance) 시키는 방식, 소위 영구 균형 방식을 채택해 왔었다. 하지만 2004년 연금제도 개혁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다음과 같은 유한 균형 방식으로 선회했다. 유한 균형 방식은 기본적으로 재정 감축을 수행하는 연도부터 무한의 장래가 아닌, 대체로 100년간의 재정 수지 전망을 작성한다. 여기서 장기 재정 목표는 대체로 100년 정도 동안 연금 재정의 균형을 추구하다가 당해 재정 감축의 최종 연도에 1년 치 분의 연금 급여를 적립금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다.(적립배율=1) 이외에도 연금보험료를 18.3%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연금 재정 균형을 위해 연금 급여 상승을 억제해리라도 소득 대체율이 5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했다.

일본의 경우, 공적 연금(후생연금+국

민연금)의 장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후생노동성 대신(복지노동부장관)에게 있다. 즉 법령에 의거하여 5년에 한번 공적 연금의 재정 상황 및 장래 전망을 계산하여, 연금 재정의 건전성 내지 지속 가능성을 검증한다.(재정 검증) 일본도 내년도인 2019년에 제4차 공적 연금 재정 감축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기금 운용 목표·전략 필요

장기 재정 목표의 설정과 함께 일본 정부가 역점을 두는 것은 장기 재정 감축을 기금 운용의 중·장기적 목표 및 전략에 연계시킨다는 점이다. 후생노동성은 재정 현황과 장래 전망을 감안하여 연금 급여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장기 재정 균형 유지에 필요한 실질적인 운용수익률(명목운용수익률-명목연금 상승률) 1.7%를 최소한의 위험으로 달성하는 목표를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표인 GPIF에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국민연금도 우리 나름의 장기 재정 추계 작업에 기반하여 장기 재정 목표를 하루빨리 분명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금 운용의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장기 재정 추계와 긴밀히 연계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단에서

‘흰눈세탁소’



김 진 구 울산중학교 교감

지만 복암에서 화순 경전선으로 연결된 탄광 전용 철도가 있었으니 당시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순 탄광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신작로를 따라 나란히 석탄 운반용 화순선이 보이면 흙먼지가 점차 흑면지로 변했다. 지붕이며 산야의 수목이 고요한 침묵으로 탄가루를 덮어쓰고 있었

다. 쌀과 연탄만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한해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던 생필품이었기에 이 칙칙한 진폐증의 원흉에게도 저항이 달하던 시절이었다. 한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흰눈세탁소’였다.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씨의 세탁소 간판. 이 황량한 탄가루 거리에 있는 세탁소 이름이 ‘흰눈’이었다. 흰 눈이 오다가도 희색으로 물들어버릴 것만 같은 이 탄광촌에 흰눈세탁소가 있었다. 건방져서 너털거리고 하얀 글씨도 거의 희색처럼 변하여 바탕색에 가깝게 되었지만 흰눈세탁소의 이미지는 내 마음에 어떻게 새겨졌다.

누가 저 이름을 지었을까. 어떤 웃이든 웃기기만 하면 흰 눈처럼 깨끗하게 세탁해 주겠다는 주인의 의지일까, 간판장이의 묘수일까, 아니면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어떤 역설의 표현일까. 나는 수 십 년이 지난 지금도 궁금하고 설렌다. 여러 홍보 글을 쓰고 캠페인 문구를 만들 때마다 이

‘흰눈세탁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이 세탁소의 이름처럼 사람의 마음을 딱 한 번에 관통하는 문구를 만들 어보지 못했다.

이제는 탄광의 거대한 화순 구암이나 복암을 지나지 않고 새로 뚫린 2차선의 곧은 아스팔트를 달리지만 이곳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려 습관적으로 내다본다. 젊은 시절 어느 무더운 날 차창으로 흑백영화처럼 지나간 흰눈세탁소의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에는 유명한 구두 골목이 있다. 신사들이 뽀내는 수제품 구두로 명성이 자자하고 명장들의 자부심도 가득한 골목이다. 골목의 간판도 ‘런던에서 최고의 구두집’, ‘영국에서 제일 잘 만드는 집’,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두 가게’ 등 자존을 내건 이름이 즐비했다. 그런데 한 구두집 간판은 ‘이 골목에서 가장 잘 만드는 집’이었다. 어느 르포 작가가 그 이유를 물으니 ‘런던의 구두 골목은 세계적인 명성이 모인 곳이다. 그러니 이 골목에서 구두를 가장 잘 만든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만드는 것이다.’는 대답이었다. 손님에게 이 간판의 의미를 소개하면 신뢰가 두둑하게 쌓일 것 같고, 입소문으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 같다. 멀리 동방의 나에게까지 소문이 났으니 말이다.

이처럼 간판이나 이름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어느 다이어트 광고 플래카드의 문구는 아찔하기까지 하다. “뽀뽀 뽀뽀 다 빼 뽀뽀 뽀뽀!” 광고 문구도 사람들의 시선이나 관심을 끌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재직하고 있는 학교 이름이 우산중학교이다. 예전에는 학교 이름을 지을 때 시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방향에 따라 지었다가 지금은 지역의 명칭이나 유래를 학교 이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산중은 지역이나 행정 명칭과는 다른 곳에 있다. 31사단 근처 삼각산 밑에 자리하고 있으며 오지동에 있다. 아주 뜬금없는 이름으로 30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실제로 우산동은 광주에 두 곳이나 있다. 북구 말바우 시장 근처 우산동과 광산구 하남지역에 우산동이 있다. 이렇다보니 학교를 찾아오는 분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옛제도 학교를 찾아온 분이 광산구 우산동까지 갔다가 시내를 한 바퀴 돌아 왔으면서 한숨을 쉬었다. ‘우산’이라는 명칭도 그렇지만 지리적인 위치와도 헷갈려서 학교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흰눈세탁소와 같은 좋은 이름이 없을까. 우산중 동문이나 지역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기 고

지방화시대, 어떤 리더십을 선택할 것인가



설 성 현 서영대 외래교수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지역의 정체성과 비전을 정립하고, 지역 주민을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실천하는 과정은 통찰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은 지역내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한 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주민이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할 책무가 있다.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역마다 많은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여념이 없다. 혈연과 지연, 학연 등등 온갖 ‘연’을 찾아 짝짓기에 열중하는가 하면, 온·오프라인을 동원,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흘리며 표 모으기에 동분서주한다. 정작 지역주민들은 누구를 왜 찍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도 대부분은 일상에 바빠 별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선택지를 골라야 할 시점이 멀리 있지 않다.

을 위해 우리는 지방 정부의 대표자 선택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후보자들의 성장 과정과 도덕성, 정책 능력 등을 이제 더 이상 대중 넘기는 사안이 아니라 선택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극복하려면 유권자들의 성숙되고 사려깊은 판단이 필수적이다. 그것이 정치를 바꾸고, 지역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지방 정부를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은 최소한 세 가지 측면의 리더십을 갖추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세계사적 안목과 혁신 주도력이다.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 경제와 사회, 과학 기술, 문화는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통찰하고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 세계의 지역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등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며 지역의 성장 비전과 전략을 이끌어낼 미래지향적 안목과 혁신적 마인드가 필수적이다.

둘째, 지역의 비전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활성화 하고, 주민의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소통과 통합 능력이다. 얼마나 폭넓고 원만하게 지역 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셋째, 중앙 정부와의 협상력이다. 이것은 구태의연할뿐더러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대통령이나 여당 마케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지역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중앙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에 관한 것이다. 추진력과 협상력은 리더의 기본적인 소양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골목대장을 뽑는 게임이 아니다. 어떤 리더십을 선택하는냐는 현 세대는 물론 10년 내지 100년 후 미래 세대의 삶의 질까지 결정되는 엄중한 책임 행위이다. 두 달후면 유권자들에게 선택지가 주어진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유권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자. 이제 유권자가 힘을 제대로 발휘할 때다.

社 說

지방선거 D-50, 후보들 정책 개발에 힘써야

이제 딱 50일 후면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는 이미 이윤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확정됐다. 기초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광역·기초 의원 최종 후보들의 윤곽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 후보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평화당 등 야권도 이에 대적할 적정한 후보를 찾고 있지만 아무래도 인물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지사 선거의 경우 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출마 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다. 박 의원은 여전히 교섭단체 문체와 부인의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출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집권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어 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된다. 그런 만큼 민주당 후보로 낙점 받으려는 예비 후보들의 초반 선거전

이 치열했다. 때로는 네거티브와 상대 후보 비방 등으로 얼룩지기도 했다.

혼탁 양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유권자는 뒷전인 채 공천에만 몰입하거나 고소·고발도 난무한다. 상대 후보 비방 대자보도 나왔다. 불·탈법 선거 운동이 예사롭지 않다. 정치 발전의 좋은 기회가 선거전 불·탈법 난무로 색이 바래선 안 될 일이다. 경찰과 선관위의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관리 활동도 절실하다.

후보들도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특히 민주당 후보들은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역 발전에 앞장설 진정한 일꾼으로서 실현 가능한 정책 개발에 힘쓰기 바란다.

지방선거는 지역민이 주인이 되어 돼 풀뿌리 민주주의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다. 따라서 유권자들도 신중한 선택으로, 지역 경제의 규모를 늘리고 틈틈이 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견인할 참 일꾼을 뽑아야 할 것이다.

이사철 부당 요금·무허가 업체 단속 절실하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업체별로 들쭉날쭉한 이사 요금과 추가 비용 요구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이사 도중 물품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 절차가 복잡한 데다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까지 난립해 주의가 요망된다.

광주시에 등록된 이사집센터는 동구 7곳, 서구 21곳, 남구 9곳, 북구 74곳, 광산구 26곳 등 모두 137곳에 이른다. 이들 업체가 받는 이사 요금은 79.34㎡(24평), 5t 용달차를 기준으로 평일에는 20만 원인데, 이사하기 좋은 날로 알려진 이른바 ‘손 없는 날’에는 최대 3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광산구 A업체는 평일 110만 원, 주말에는 1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손 없는 날엔 125만 원을 줘야 예약이 가능하다. 같은 광산구의 B업체는 평일·주말 상관없이 88만 원, 손 없는 날엔 5만~10만 원의 웃돈을 내야 한다. 북구

C업체의 경우 주말, 평일, 손 없는 날 상관없이 100~105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사 비용도 문제지만 계약 후 이삿짐이 예상보다 많다는 등의 트집을 잡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요금이 저렴한 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물품 손상 때 사실상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무허가 업체가 광주에만 300여개 이상 난립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광주 지역 포장 이사 상담 건수는 2015년 85건, 2016년 95건, 2017년 100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사 요금을 부풀려 요구하는 행위나 무허가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이사철 만이라도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도 이사 견적을 뽑을 때 업체의 화물 운송 주선 사업 허가증과 배상 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無 等 鼓

그의 직업은 ‘방화수’(fireman). 불을 지르는 사람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집집마다 화재 예방 시설이 돼 있고, 집도 불연성 소재로 지어져 예전 같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이 필요 없게 됐다. 대신 그에게는 집에 감춰진 책을 찾아내 불태우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방화서장 비티는 왜 책을 불태워야 하는지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책이란 옆집에 숨겨 놓은 장전된 권총이야. 태워 버려야 돼. 무기에서 탄환을 빼내야 한다고.”

10여 년간 아무 생 각 없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던 베테간은

화씨 451도

명 중 4명이라는 의미이다. 올해는 ‘책의 해’이기도 하다. ‘화씨 451’에서 상상하는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비껴갈 수 있는 묘안이 절실하다. 저자는 출간 5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지인이 일어나 온전하게 남아 있는 건물이 두 채밖에 없다고 가정할 때 한 건물은 병원, 다른 건물은 도서관이 될 것이다. “독서란 우리네 삶의 중심이 예요. 도서관은 바로 우리의 두뇌죠. 도서관이 없다면 문명도 없습니다.”

국 성인의 연간 독서율은 59.9%다. 이는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성인이 10

명 중 4명이라는 의미이다. 올해는 ‘책의 해’이기도 하다. ‘화씨 451’에서 상상하는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비껴갈 수 있는 묘안이 절실하다. 저자는 출간 5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지인이 일어나 온전하게 남아 있는 건물이 두 채밖에 없다고 가정할 때 한 건물은 병원, 다른 건물은 도서관이 될 것이다. “독서란 우리네 삶의 중심이 예요. 도서관은 바로 우리의 두뇌죠. 도서관이 없다면 문명도 없습니다.”

/송기태 예방부장 song@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and Korean text. Include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headers,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